

## ‘사회’로서의 민족(nation), 사회이념으로서 민족주의(nationalism)

김 동 춘(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1. 도입

확실히 한국에서 ‘민족’ 혹은 ‘자주’는 이제 낡은 개념이 되었다. 작년에 민족문화작가회의가 공식 명칭에서 ‘민족’을 빼고 ‘작가회의’로 개칭한 일이 그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대선이후 민노당 내부에서는 ‘자주파’가 낮은 지지율을 가져 온 근원이라는 비판이 심각하게 제기되었으며, 이제 당을 쪼개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구좌파’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사용해왔던 주류 언론은 ‘자주’를 앞세운 참여정부 때문에 그 동안 한미관계가 꼬였으며 국익이 손상을 입었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한미 유대관계를 정상화하자고 한다.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 비판은 거의 유행이 되었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한국이 지구화된 경제질서에 깊이 편입되어 있어서 내 것과 남의 것의 구별이 거의 무의미하게 되었으며, 이미 다민족, 다인종 사회에 접어들어 있는 현실에서 아직도 ‘단일민족’ 운운하는 것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일임에 분명하다.

탈냉전 이후 구유고지역, 구소련지역에서 분리주의 민족주의가 재연되기는 했지만, 전지구적으로 보면 이제는 다른 차별에 의해 부차화되고 있다. 국제정치적으로 보더라도 민족은 하나의 행위주체(agency)로 간주될 수 있는 단위는 아니며, 갈등과 분쟁 역시 순수하게 민족, 종족 간의 대립만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미국 내의 소수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미국의 부자들보다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소수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와 더욱 유사한 처지에 있다. 중국과 일본은 정치적으로는 점점 더 민족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결속되어 가고 있다.

파시즘의 기억이 정치사회에 내재화된 유럽과 영미 권에서 ‘민족주의’는 대체로 극우 파시즘을 연상시켜 왔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 민족주의는 반미반일을 내용으로 하는 긍정적인 이데올로기로 간주되어 왔다. 그것은 일제 식민지 체제와 이후 주변 강대국에 점령당한 집단적 경험이 한국의 정치와 문화에 깊이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제국주의 하에서 민족주의 운동은 식민지적 차별의 철폐와 정치적 자유와 인권 보장, 대중의 생존권 유지와 인간적 자존심을 집약한 저항과 해방의 담론이었기 때문에, 해방은 되었지만 여전히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이러한 불이익을 당한다는 판단이 우세했던 한국에서는 정서적으로 민족주의가 여전히 강한 호소력을 지녀왔다. 분단국가 건설 이후 남북한에 나타난 국가주도의 애국주의(patriotism)는 모두 국가 내부의 정치적 억압, 계급 간의 분열을 은폐하고 대중을 국가에 통합시켜내기 위한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지만, 반독재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반미 운동들은 그것과 달리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주성의 회복을 북한과의 관계에서 적대보다는 화합과 통일을 지향했기 때문에 체제부정적 성격을 지녔다.

민족(nation)은 인간의 한 집합체이며 존재, 행위의 선상에서 정의되는 단위이다. 민족은 인종과 더불어 출생과 관련되거나 언어, 문화의 동질성을 전제로 한다. 사실 민족주의(nationalism)가 민족에 선행한다는 주장도 있지만,<sup>1)</sup> 민족주의는 민족(국민) 국가를 수립하려는 의지 혹은 국민국가를 이루거나 국민국가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정 책,

1) “민족주의가 ‘민족’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민족을 발명해 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Gellner, 1971:169)

정치로 정의되어 왔다.<sup>2)</sup> 민족 혹은 민족주의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은 아니며, 전쟁, 침략, 지배, 자본주의 발전, 시민권 등의 국제정치, 국제경제질서의 확산과 문화, 정치단위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스스로 반봉건 혁명을 완수한 극소수의 국가에서 민족주의는 국민국가 형성을 위한 프로젝트였지만 후발국의 민족주의는 지배세력에 차별을 받아 오거나 세계 자본주의 발전에서 뒤쳐진 지역 엘리트와 주민들의 탈식민화, 차별극복 운동의 특징을 갖는다.

민족,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치학, 경제학 그리고 문화연구의 주제가 되어왔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정치엘리트의 사상과 이념으로서 민족주의에 초점을 두거나 문화, 사회심리 현상으로서 민족주의를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 전자는 민족이란 사실상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며, 민족주의가 주로 지식인들에 의해 조성된 것이며, 국가 이익을 위한 동원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주목한다. 후자의 경우는 문화적 정체성, 기억의 공유 등을 주목하고 있으나, 민족 민족주의가 매우 구체적인 정치경제 현실의 복합적 결과라는 점이 과학적으로 분석된 사례는 드물다. 민족, 민족주의는 단순한 위로부터의 동원의 이데올로기만은 아니며, 또한 특수한 역사, 문화 현상만도 아니다. 민족, 민족주의는 근대화, 산업화, 인구가동으로 인한 모순, 차별, 배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나아가 전쟁과 침략 등 민족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확보하려는 모든 시도까지 포함한다.

현대 한국 민족주의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 우리는 ‘민족’을 정의하고, 민족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대중들의 언술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볼 필요가 있다. 대중들이 자신이 민족에 속해있다고 생각하고 민족주의 지향을 갖는 것은, 겔너(Gellner)가 엔트로피 저항적(Entropy-resistant) 이라고 부른 바, 균등화의 확산의 요구와 연관되어 있다. 즉 제국주의 지배, 침략 권력의 차별주의 등으로 ‘사회’ 내의 법과 정의가 붕괴되고 대중들이 자신과 세상을 맺고 있는 관계가 파괴되었다고 생각할 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연대가 형성된다. 이 경우 연대는 근대이전부터 존재하는 원초적 집착(primordial attachments) (Greetz, 1963), 근대화로 인한 사회 구성원 간의 평등성과 언어와 문자의 공유로 소통이 확보될 경우에 성립할 수 있으며, 차별 억압하는 권력을 바로잡아 붕괴된 사회를 다시 세우려는 도덕적 열정, 집합적 의지로 결집된다. 여기서 법, 제도, 도덕, 정체성 등을 사회관계(social relations) 혹은 사회(society)라 본다면, 민족주의는 연대체, 혹은 베버(Weber)가 말하는 감정 공동체(community of sentiment)로서 사회를 구성/보호하기 위한 지식인과 대중들의 자연발생적이고 자구적이고 집합적인 의식, 운동, 헌신 등으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즉 우리는 민족 개념 혹은 민족주의의 사회적, 도덕적 기초를 파악할 때, 그것이 갖는 지속적 힘을 이해할 수 있다.<sup>3)</sup>

최근 한국에서는 민족, 민족주의에 대해 존재론적 설명보다는 가치론적 평가가 압도하고 있다. 즉 민족주의는 좋은 것인가 병리적인 것인가, 지켜야 할 가치인가 버려야 할 가치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민족주의의 성격과 영향력의 원천은 무엇인가라는 논제를 압도하고 있어서, 이 영역에 관한 한 이론적 천착보다는 정치적 공방의 성격으로 곧바로 비화하는 경향이 있다. 후자가 중요치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일관하면 정작 지속되는 현상에 대한 학술적 접근은 계속 뒷전으로 밀리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전자에 쟁점에 치중을 하되 그것에 기초해서 후자의 쟁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려 한다.

2) 겔너(Gellner)는 민족주의란 민족과 국가를 일치시키려는 운동이라고 개념화한다. 즉 그가 말하는 것처럼 국가 혹은 정치단위를 고려하지 않고 민족주의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Ernest Gellner, *Nation and Nationalism*, London: Basil Blackwell, 1983 (어네스트 겔너, 이재석 옮김, [민족과 민족주의], 예하, 1988, 8쪽)

3) “민족이란 무엇인가”(Qu'est-ce que'une nation)이란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르낭(Ernest Renan)은 개인의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을 지닌 도덕적 양심(moral conscience)이 비유하였다. 즉 민족, 혹은 민족주의의 개념에는 통상 이러한 초개인주의적이고 도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 2. 근대화와 ‘사회적 응집’의 이념으로서 민족, 민족주의

민족주의보다는 민족이 더 정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sup>4)</sup> 우선 민족이라는 관념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서양의 학자들은 대체로 민족을 근대에 들어서 만들어진 관념이라고 보지만, 근대 이전 오랜 세월 문화, 인종, 정치적으로 하나의 정치단위를 이루며 살아온 한, 중, 일과 같은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는 종족 혹은 민족이 정치단위와 일치해왔기 때문에 이들과 다른 조건에 있었고, 따라서 “민족은 근대 현상”이라고 보는 입장은 서구중심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sup>5)</sup>

그러나 중세 유럽에는 봉건 왕조, 혹은 종족단위가 실제적으로 존재했고, 동북아시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권 아래 여러 주변 왕조, 친족집단이 실제적으로 존재했으며, 남미 아시아나 아프리카 여타지역에는 여러 왕조, 부족, 종족집단이 존재했기 때문에 단순한 인종, 종족집단과 구별되는 정치단위로서 ‘민족’이 근대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국민, 혹은 민족으로 번역되는 nation은 분명히 서구에서의 시장경제와 개인(individual)의 탄생, 가족, 친족을 넘어서는 시민 집단 즉 정치사회 단위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근대적 현상이고, 봉건 신분질서의 해체와 정치적 공동체 형성이라는 조건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 단지 반봉건 근대화 혁명을 내부로부터 추진했던 이들 서유럽의 예외적인 지역에서는 nation이 분명 개인이라는 기초를 갖고 있음에 반해 그들 국가에 의해 정복을 당하거나 차별을 당함으로써 그 이전부터 공유하던 종족, 언어적 동질성이 제국주의 침략으로 하나의 민족적 정체성으로 구체화된 곳에서는 근대 이전에도 어느 정도 언어, 문화의 동질적인 단위가 존재했으며 이 경우 민족은 개인의 집합이라기보다는 확대된 가족 혹은 공동체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는 점은 있을 것이다. 어원인 라틴어에서 ‘출생’ 등의 의미를 갖는 nation은 스스로 산업화, 영토의 경계를 갖는 국가를 창출할 수 있었던 나라에게는 권리와 의무의 소유자들인 주권자들의 집합 즉 ‘국민’의 개념으로 번역되지만, 제국주의 침략을 받아 투쟁을 통해 국민국가를 건설하려 했던 지역에서는 민족(民族)이라는 번역어가 보여주듯이 종족적(ethnic), 역사 문화적 동질성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에 반개인의 확대된 가족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구한말 이후 식민지 시기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동포(同胞)라는 개념에도 혈연적 요소가 훨씬 강조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 nation 개념의 공통점은 구성원 간의 언어와 문화의 상대적 동질성, 영토의 공유, 혹은 정치적 평등과 시민권(citizenship)의 수립 등이 어느 정도 전제된다는 점이다. 혁명 등의 방법으로 자생적으로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한 나라에서는 민족이 개인주의, 대의제 등에 기초한 정치단위와 동일시되고 민족주의는 시민적 민족주의의 양상을 지닌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점령과 강권적 통치에 의해 스스로 경제, 언어, 교육, 문화적 소통단위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경우 민족은 장차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사회 단위 혹은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공동체이며, 따라서 이 경우 민족주의는 억압민족과의 대립의 극복,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 발전된 근대국가를 조속히 수립하려는 열망을 집약한 담론이고 다분히 종족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의 양상을 지닌다.<sup>6)</sup> 그래서 민족주의는 19세기 후발국이었던 독일의 사례가 그러했듯이 후발국에서 훨씬 강한 불꽃을 피우게 되었으며, 이러한 종족적 민족주의는 이후 침략주의

4) 민족을 객관적으로 정의하려는 모든 노력이 실패했다는 홉스봄(Hobsbaum)의 지적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언어, 종족, 공유 거주지역, 공통의 역사 이 모든 것을 기준으로해도 완벽하게 민족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집단을 설정하기는 어려우며 언제나 예외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5) 신용하(1987, 2001)이 대표적이다. 그는 서구의 민족개념은 이미 근대 이전에 준민족, 선민족, 원민족의 형태로서 나름대로의 민족단위의 정치체를 발전시켜온 한국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당수의 한국사학자들도 전근대 민족의 존재를 긍정하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다(노태돈, 1992 참조).

6) 이 때문에 민족주의는 시민민족주의(civil nationalism)와 종족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의 두 유형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Greenfeld, 1992; Smith, 1991:9-15).

로 돌변하기도 했다.

그런데 젤러(E. Gellner)는 근대화, 산업화는 유동적이고 균등한 인간집단을 만들어내게 되고 여기서 전통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소통의 양식과 응집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말한다. 결국 산업사회가 수반하는 새로운 문화적 욕구, 안정감과 소속감 추구의 결과가 민족 혹은 민족주의라고 보았다. 물론 그의 이론은 주로 산업화, 근대화가 민족, 민족주의를 만들어낸다고 보는 점에서 민족개념이 왜 후발국가에서 더 설득력을 갖는지 충분히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민족 혹은 민족주의를 사회적 응집의 한 방식으로 정의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sup>7)</sup> 홉스봄 역시 과거의 민족주의와 후기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분리주의 민족주의를 정리하면서 ‘귀속에의 굶주림’, 사회해체에 반응으로서 ‘법과 질서에의 굶주림’이 민족주의의 동력이라고 보았다(홉스봄, 1994:226)

즉 국민 혹은 민족은 개인 혹은 가족을 기본 세포로 하는 근대의 인위적 정치사회 단위이며, 이 단위 내에서는 법, 제도, 도덕, 습속, 정체성(identity) 등의 공유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회적 응집이 전제된다. 근대 국가의 수립, 혹은 그것을 위한 혁명과 운동은 바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인간들 간의 새로운 사회관계 수립을 추구하는 집합적 운동을 의미한다. 물론 넓은 의미의 ‘사회’는 근대 국가 이전에도 존재했고, 또 국가가 아직 수립되지 않은 부족집단, 오늘날처럼 지구화된 경제질서 하에서 지구적 소통망이 형성된 초국가적 단위에서도 존재한다. 그런데 사회관계의 수립 즉 법, 제도, 도덕, 습속, 더 나아가 언어와 문화의 공유와 정체성 형성은 주로 헌법적 질서를 갖는 국가에 소속된 국민들 간에 이루어진다. 이 근대국가에서 인간은 법 아래 동등한 자격을 갖는 교류와 교환의 주체로 등장한다. 만약 민족이 국민, 즉 시민권을 공유한 사람들의 인위적인 집합체라고 본다면, 우선 민족은 무사회적(asocial)인 것 혹은 ‘상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social)으로 봐야 할 것이다.<sup>8)</sup> 즉 저항적 민족주의, 분리주의 민족주의에서는 민족을 자연적 영속적 성격을 중시하면서 민족은 사회 이전의 생물학적이고 원초적인 것으로 보지만, 민족이 역사적 실체이며 또한 경제생활의 공유를 전제로 한 권리와 의무의 소지자들의 결합체로 본다면 민족은 공동체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위적 사회 단위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반봉건 근대혁명을 달성한 프랑스와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이처럼 민족이 국가 혹은 사회와 내용적으로 동일한 것이지만, 19 세기의 후발국이었던 나라를 포함한 20세기의 모든 후발국, 피식민지, 후기공산주의 지역에서 엄밀하게 말해 법, 제도, 도덕, 교환의 규범으로서 사회는 존재하지 않거나 대단히 굴절된 양상으로 존재한다. 즉 이들 지역에도 그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가족, 친족집단 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신분질서가 잔존하고 있으며, 제국주의는 정복지의 신분질서를 적절히 용인하기도 할뿐더러, 피억압 주민을 정치적으로 배제하고, 근대적 법, 제도, 도덕 혹은 정의의 원칙, 교환이 적용되는 단위로서 ‘사회’를 부인한다. 19세기 이래로 침략국 혹은 제국주의가 표방해온 문명화 및 경제주의 담론은 한편으로는 피정복지의 ‘전통 사회’를 해체시키면서도 새로운 사회 건설을 억제한다. 즉 식민지, 강제 이주자 사회에서는 시장경제의 수립 역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국가 즉 법과 질서가 주민의 동의없이 강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정의(injustice)한 체제이며, 사회적 모순이다.<sup>9)</sup> 그러한 정복체제 하에서는 구성원 간의 관계 맺음이 굴절, 해체된 형태로 존재한다. 이 경우 국가 즉 사회 혹은 사회관계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통한 주권의 인정, 정의의 원칙에 기초한 헌법질서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7) Ernest Gellner, *Nation and Nationalism*, Basil Blackwell, 1983 외 그의 다수의 저작

8) 사회 즉 이익사회는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기초로 한다.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기초로 한 사회적 관계가 통상 우리가 사회라 부르는 것이다. 이 사회는 2차적 관계이므로 혈연, 인종 등 원초적인 변수에 기초를 둔 공동체와 분명히 구별된다.

9) 그린펠드(Greenfeld)는 민족주의는 사회질서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반작용에서 시작되었다고 강조한다 (Greenfeld, 1993:49)

한다.<sup>10)</sup> 그것은 제국주의 억압, 경제적 식민화 상태에서는 개인이나 자유, 인권, 시민권도 설 자리가 없을뿐더러, 정치적 대의제나 합리적인 교환의 체계도 존재할 수 없고, 공식화된 언어, 교육 문화 등에 의한 집단 구성원 간의 공유된 의식이나 안정적인 사회질서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구성원 간에 공유해야 할 교환의 질서, 법과 제도, 권리와 의무의 묶음을 국민국가라는 단위가 보장할 경우 (선진 자본주의 국가, 제국주의 국가의 경우), ‘국민’이라는 응집의 단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상 속의 응집의 단위인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추구하고, 여기서 민족은 다분히 개인에게 소속감을 부여해주는 반개인적, 초개인적 종족, 문화적 공동체로서 그려진다. 국민 혹은 민족형성을 위한 노력, 민족적 차별 철폐를 위한 투쟁은 대체로 근대사회, 곧 근대 국민국가, 주권,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건설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선진 자본주의에서 건설한 근대 ‘사회’의 대체물이 식민지 지역, 이주민 집단의 주민들에게는 ‘민족 공동체’가 셈이다. 피식민지 후발국에게 민족은 곧 향후 건설할 사회의 맹아이자 ‘주권에 대한 문화적 감수성’(Giddens, 1987:219)이라 볼 수 있다. 민족은 그들의 소속감을 확인하는 사회단위가 된다. 제국주의의 파괴적 측면이 강할수록, 정치경제의 모순 사회해체의 위기가 심각할수록 민족 개념은 더욱 더 신비화되고 이상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공동체 지향의 민족주의 운동에 비합리적이거나 비이성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근대이전의 혈연 공동체로 돌아가지는 운동이라고 쉽게 간주할 일은 아니다. 즉 식민지 후발국의 민족주의 운동, 후기공산주의 국가의 민족주의에 아무리 혈연, 인종 등 자연적 요소를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여러 형태의 피침략지역이나 후발국의 민족주의가 지향하는 민족공동체는 일단 부정의한 제국주의 지배나 사회적 모순, 경제적 위기에 대한 반응이며, 억압주민의 정체성, 문화적 존재근거를 확인시켜주는 관계와 소통의 단위인 새로운 ‘사회’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이다.<sup>11)</sup>

결국 넓게 보아 민족, 민족주의는 근대화와 산업화의 결과물이거나 그것의 자기모순으로 발생한 침략과 전쟁, 그리고 정복지에서 발생한 차별, 억압, 부정의, 인권유린 등 사회적 모순을 바로잡고, 해체된 사회관계를 공동체적 원리 하에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응집양식’, 혹은 ‘사회통합의 대체물’일 따름이다.<sup>12)</sup> 그러나 침략에 의한 근대화, 시장경제의 이식이 자율적인 근대 사회의 수립을 낳지 못하고 전근대적 신분질서의 잔존, 근대적 법과 제도 수립의 실패, 도덕 질서의 붕괴, 구성원 간의 교류와 소통의 굴절 등으로 나타날 때 민족주의는 더욱 강성하게 되며, 이 경우 민족주의는 ‘붕괴되었다고 간주된’ 공동체를 복원하거나,<sup>13)</sup> 정의의 원칙이 작동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수립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의 양상을 지니게 된다. 즉 과거 식민지 지역, 후발국에서 민족주의의 구호가 시민적 내용보다는 종족주의, 공동체주의 요소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사회 만들기’의 내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의 사회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라기보다는 다분히 이타주의, 반개인주의적 공동체주의 등의 내용을 갖는 경우가 많다.

### 3. ‘사회의 자기방어’로서 민족(국가)

10) 오웰은 민족주의의 특징을 집착(obsession), 실제에의 무관심, 불안정(instability)로 정리한 바 있다. George Orwell, "Notes on Nationalism"

11) 구공산권 국가에서 자유주의 ‘시민사회’의 등장은 곧 조직 자원·연줄로 무장된 구관료, 구정치세력, 노벨클라 투라 세력의 친민적 자본축적의 ‘자유’를 의미하였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제 안정성과 소속감을 상실한 민중들의 불안감에 편승한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가 부활된 것이다.

12) 미로슬라부 흐로호는 동구의 구공산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방향상실이 결국 민족을 궁극적인 담보로 삼았다고 지적하였다(홉스봄, 1994: 221).

13) 여기서 ‘붕괴되었다고 간주된’은 실제 식민지 이전의 봉건적 신분사회가 공동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자들은 이 봉건사회를 매우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의 제국주의는 마르크스식의 표현으로 말하면 식민지 지역을 형식적으로 포섭하는 것이고, 지구화는 자본이 영토를 넘어서도 세계의 모든 지역을 실질적으로 포섭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영토가 군사 정치적으로 제국주의에 점령되지만, 후자의 경우 영토의 법적 주권은 유지되지만 그 경제, 문화 영토는 실질적으로 다국적 자본의 세력권 안으로 편입된다. 전자의 경우 억압기구가 전면에서 나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자본과 경제이데올로기가 전면에서 나선다. 오늘 지구화 시대의 다국적 자본의 저발전 지역의 투자는 군사력을 앞세우지 않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제국주의와는 상이하지만 문명, 시장, 경쟁의 이름하에 해당 국가의 주권 즉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경제지상주의, 시장근본주의를 확산시킴으로써 '사회'를 붕괴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측면이 있다. 특히 오늘날의 지구화의 논리 특히 시장근본주의는 과거의 제국주의와는 달리 이데올로기를 무기로 해서 국가, 민족 그리고 사회의 존립 의의를 부인한다. 국가 혹은 사회가 해체되어 모든 것이 유동적이 되면, 경쟁력을 갖춘 지구적 대자본은 대단히 유리한 위치에 서기 때문이다.

원래 후발국, 제3세계에서의 민족 개념의 수립, 민족주의는 자본주의 근대 세계체제의 불균등 발전,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과 피식민지 종족에 대한 억압의 산물이다. 이 경우 민족주의는 좌절된 근대화에 대한 반작용이자 외세와의 투쟁을 통해 국민국가를 건설하고, 당당한 주권자로서 인정받으려는 열망의 반영이기도 하다. 독일과 일본의 유럽과 미국 따라잡기 민족주의는 바로 자본주의 불균등발전의 일차적 산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2차 대전 후 제3세계 민족주의는 미국주도의 자본주의 세계체제 하의 모순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민족이라는 단위는 초역사적, 자연적 집합체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간 체계(inter-state system)의 성찰적(reflexive) 상호작용(Giddens, 1987:198-221), 정확히 말하면 유럽에서의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와 그 상부구조로서의 국민국가, 제국주의의 침략과 차별에 의해서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유럽의 국민이라는 정치단위는 전쟁 등 봉건질서의 해체 국면에서 형성되었듯이 '민족' 역시 국가간 체계 하에서 근대화, 자립적인 산업화에 뒤처졌거나 실패한 종족들이 스스로 사회 혹은 주권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존립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민족 개념과 민족주의 운동은 단순히 제국주의의 정치 문화적 지배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저항으로서 민족은 자본주의의 경제적 지배에 저항하기 위한 가족, 친족, 지역 공동체, 혹은 문화적 공동체의 자기방어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이 경우 민족은 전통적 지배계급의 일부인 지식인 집단 혹은 일부 식민지 신흥 부르주와의 이익실현을 위한 이데올로기기의 성격도 지니고 있지만, 모든 민족주의가 곧 식민지 부르주와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민족주의의 주창자는 주로 제국주의가 가져온 부정의와 사회해체 위협, 주권의 박탈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지식인들이며 주요 담지자는 제국주의 경제 침략에 의해 계층차별 질서가 고착되고 처참한 상황으로 내몰린 식민지의 평균적인 민중이다. 이 경우 '민족'은 제국주의 상품의 침투와 시장권 장악 하에서는 생존의 한계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이 스스로의 생존 기반의 구축, 즉 자체의 시장과 방어적인 교환망, 정의롭고 이타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운동의 형태로 존재한다. 제국주의와 결탁한 세력이나 관료, 지주, 대 부르주와는 침략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맞서서 자신의 생존기반과 교류의 기반을 지키려는 운동은 공동체주의의 내용을 갖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피식민지의 민족주의는 사회주의와 친화력을 갖게 된다.<sup>14)</sup>

공동체 지향의 후발국 민족주의는 식민지, 반식민지 종속국 내의 계급적, 사회적 차별은 없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설사 있더라도 민족 간의 차별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식민지 후발국의 지식인들이 표방하는 민족주의는 이들 지역의 모든 주민이 하나의 동질적인 민족구성원, 사회구성원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사실과 복합

14)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친화력은 이미 역사적 경험으로 입증되었다. 피식민지지역의 관료와 부르주와는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의 정치경제적 침략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저항적 지식인과 민중들이 민족주의의 주요 담지자가 되었다.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다분히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그것은 일단 국민국가를 수립하자는 정치이데올로기이지만 동시에 이타적 공동체를 구성하자는 사회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국민국가의 엘리트가 제창하는 민족주의는 국가 내의 차별을 은폐하고 사회 성원 내의 더욱 소외된 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민족주의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니다. 식민지 지식인들, 이주민들이 제창하는 민족의 개념은 분명히 정치 사회적 근거를 갖고 있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국민(민족)국가의 건설은 개인의 해방, 그리고 보편적 시민권 부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저항 민족주의는 시민권 확보 투쟁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주로 엘리트에 의해 주창되지만 실제로는 피억압지역 거주민 중에서 사회적 모순을 첨예하게 느끼며, 정의의 붕괴에 민감하며, 실제로 무권리 상태에 있는 밑바닥 사람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또 환영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식민지의 민족주의는 계층적 차별을 넘어서는 하나의 공동체 지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여기서의 이상으로서 공동체는 나름대로의 물질적 사회적 근거도 갖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차 대전 후 독립한 나라들은 물론 오늘날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민족국가단위의 경제발전 혹은 발전국가의 호소력이 매우 컸던 것도 납득할 수 있다. 실제로 후발국의 노동자들에게 국가 혹은 민족 단위의 발전은 개인과 가족의 물질적 향상을 보장해 주는 유일한 정치적 단위였다. 중국이 그 실례다. 예를 들어 중국의 빈곤선 이하 인구는 1990년 3사람 중 1인이었으나 2007년 현재 10명 중 1명이다.<sup>15)</sup> 이렇게 보면 오늘 자본주의 발전을 추구하는 중국 노동자나 농민에게 민족(국가)은 상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구체적 공동체다. 박정희 시대 다수의 한국 농민이나 노동자들이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지지한 것 역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재일교포들에게도 한반도의 통일은 자신의 지위를 좌우하는 매우 구체적 과제다(서경식, 2006:108-109) 시민권은 자본주의 세계체제 하에서 민족국가에 소속된 것을 전제로 획득된 것이다. 시민권이 정치영역에서 출발해서 제한적으로나마 사회영역으로 확대되자 그 소지자들의 결합체, 즉 민족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누리는 권리의 확대는 민족이 점차 사회와 일치하게 된다.

국민 혹은 민족이 물질적 사회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점은 선진 자본주의의 경우에서도 확인된다. 카(Carr)가 말한 민족주의의 3단계, 즉 자본주의적 계급분화,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고 국가가 노동자의 복지 문제에 개입하게 된 1914년 이후의 민족주의는 '사회화'된다.<sup>16)</sup> 2단계까지의 민족주의가 개인주의, 민주화 등의 과제와 결합되어 있었다면 3단계의 민족주의는 애국심으로서 국가 구성원의 복지 문제와 결합된다. 즉 고용과 복지는 국가 정책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국민의 충성심은 이러한 복지확충에 의해 확보된다. 흔히 좌파로부터 제2인터네셔널의 파산이라고 공격받는 독일 노동자의 1차대전 참전, 민족주의의 노동계급 포섭은 이러한 물질 토대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즉 이 시점부터 민족, 민족은 하나의 사회단위로서 성격을 강하게 갖게 되었으며, 구성원의 충성확보를 위해 중요한 사회경제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적어도 지구화에 의해 국가의 시장개입이 현저히 위축되는 90년대 초반 이전까지 '민족의 사회화'는 지속되었다. 카아가 말한 바 복지국가의 수립으로 인한 민족의 사회화는 '사회주의의 민족화'와 동시에 진행되었다. 과거의 사회주의 그리고 현존하는 북한은 바로 민족화된 사회주의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민족국가 내에서의 계층, 계급, 인종, 성적 차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다수의 노동자를 중간층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을 수반하였다. 따라서 다수의 농민, 노동자들은 국제주의에 경도되기 보다는 민족단위의 '사회'를 받아들였다. 이것이 민족해방투쟁에서는 물론 선진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민족(국가)에 대한 노동자의 충성심이 지속되고 국제주의 좌파가 소수파로 전락한 이유였다.

15) *Korea Herald*, October 18, 2007

16) E.H. 카아, "민족주의 세 단계",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창작과 비평사,

지구화(globalization)는 ‘민족의 사회화’ 즉 복지국가와 사회주의의 붕괴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지구화는 확실히 민족, 민족주의의 기반을 결정적으로 붕괴시켰다. 그래서 모든 저항의 거점을 파괴한 시장은 이제 히말라야의 은둔국 부탄까지도 변화시킬 정도로 세계를 지구적 자본의 영토로 편입시켰다. 컴퓨터와 정보혁명은 전세계의 젊은이들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편입시켰으며, 영어를 세계어로 만들었다. 토착문화 혹은 공유된 기억은 점점 사람들의 정신세계에서 적은 부분만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장의 지구적 확산, 시장의 국가 내 모든 영역의 지배는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시장은 모든 개인을 상품의 경쟁적 거래자로 만들 수는 없으며, 자연과 노동력까지 상품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고, 모든 노동력을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는 없다. 즉 지구화 질서 속에서도 쉽게 이전되거나 사라지지 않으면서 대중의 생존의 근거가 되는 법, 도덕, 제도 등이 오늘의 시점에서의 민족 혹은 민족국가의 실제 내용이다. 문화와 언어, 자연자원, 기술과 교육 인프라, 사회 복지 시스템, 중소기업을 포함한 영세기업, 노동자와 농민 및 그들의 재생산 기반, 역사적 기억 등이 그것이다. 인간은 물질적으로 재생산되어야 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재생산되어야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자원, 기술, 중소기업, 노동자와 농민 등이 전자라면 언어, 공유된 역사의식 등은 후자에 속한다. 그래서 민족(국가)은 정치적 단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경제 단위이기도 하다. 예를들어 WTO 체제, 한미 FTA에 반대하는 농민과 노동자들은 반미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을 위해 민족(국가) 경제를 지키자고 요구를 한다. 이들의 요구 속의 민족주의적 요소는 반드시 국가나 엘리트의 선동에 의한 것은 아니고 자신의 이해를 감추는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특별히 이들이 민족주의자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우리 농산물’, ‘우리 일자리’를 지키자는 자신의 생존의 필요를 위한 요구에 의해 다국적 자본에 대해 국가가 사회적 약자의 시민권을 보호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일제하에서 소작쟁의나 노동쟁의에 참가했던 농민들과 이들의 처지는 다르지 않다.

과거 제국주의에도 그러했듯이 민족주의는 자본의 가치실현상의 한계, 자본축적의 자기모순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민족주의는 엘리트에 의해 표방되지만 대중들이 더 열렬히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대중이 민족주의에 경도하는 것은 그들의 생존권 유지, 관계망 유지의 필요와 연관되어 있다. 대중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온전히 유지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가시적 차별 질서를 정착시키는 구제국주의와 달리 오늘날의 다국적 자본의 지배와 미국 패권주의는 대중들을 민족이라는 상징으로 결집시키지는 못한다. 전자의 경우는 피해자들이 가시적 적인 제국주의에 맞서서 결집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은 개인으로 파편화되고, 그러한 질서를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주의는 지배/피지배,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 자체를 없앤다.<sup>17)</sup> 탈냉전 이후의 민족주의가 과거처럼 민족국가 수립운동의 지향성을 갖기 보다는 우익 종족주의, 분리주의, 인종주의, 근본주의 이슬람 운동, 반지구화 운동 등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회의 자기방어 즉 공동체 지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 4. 민족, 민족주의의 대중적 기초

시장경제를 기초로 한다고 하더라도 근대사회는 이해관계로만 결합되어 있지는 않다. 중동의 여러나라처럼 자본주의 경제질서가 도입된 상태에서도 종교가 사회적 응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우도 있다. 자본주의 모국인 미국조차도 겉으로 보면 건국의 전통과 정신을 금전적 이해보다 더 중시한다. 근대국가(사회)는 모두 나름대로의 응집성의 원

17) “세계는 평평하다”는 토마스 프리드만의 담론이 대표적이다. 지구차원에서는 문명의 충돌만이 존재한다는 헨팅턴의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담론은 국가 혹은 자본의 작동을 배제하고 있다.



리를 발전시켜왔다. 개인주의, 법의 지배, 대의제, 이익집단 등은 모두 근대국가가 구성원을 하나로 응집시키는데 중요한 매개체들이다. 그러나 개인이 모두 국가에 소속된 '주권자'라는 근대국가의 가치체계는 가장 강한 응집성의 원리로 작용한다. 응집, 혹은 동의는 정치엘리트들의 지배의 의도 혹은 순수하게 종교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않는다, 그것은 어느 정도 경제적 욕구의 충족 즉 성장과 발전에 대한 기대 속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애국심 혹은 민족주의는 대체로 경제이데올로기와 결부되어 있다.

그런데 제국주의 지배체제, 특정 국가의 타민족 지배 차별 체제는 피식민지 지역의 주민들, 특히 하층민의 자발적 동의와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반대로 제국주의 억압과 착취 차별 체제는 차별받는 주민들 간에 강력한 정서적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차별에서 오는 박탈감과 분노다. 그런데 모든 인종적, 민족적 억압, 차별이 자동적으로 지속적인 저항적 응집체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젖은 장작은 불씨가 있어도 타지 않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근대이전에 상당한 역사 문화적 전통과 동질성, 공유된 역사적 기억이라는 인화력이 있는 재료가 있을 때 민족주의라는 불꽃이 타오르는 법이다. 그래서 민족주의는 단순히 피해의식의 발로는 아니다. 일단 국가가 건설되는 국가가 조직적인 교육과 선전을 통해 민족주의를 조장할 수도 있다. 오늘날 북한의 민족주의는 일제 식민지 체험, 미국과의 전쟁체험이라는 공통의 기억에다 전체주의적인 국가가 조장한 이데올로기 주입과 결합되어 가장 강고한 형태로 발전되었다.

피식민지 지역의 민족주의가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단순한 시민권 쟁취운동과 다른 의미의 운동인 점이 여기에 있다.<sup>18)</sup> 원래 민족, 민족주의는 다분히 종교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대체로 정치권력의 획득, 참정권의 확보 등을 목표로 한다. 민족주의는 민족주의가 구성원간의 형평성이 보장되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것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족을 넘어서는 사회단위에의 소속, 초개인적 공동체에 속에서의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확인, 인정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족주의는 집합적 존엄성을 추구하려는 욕구의 반영이다. 민족(族)을 가족(族)의 비유하는 것은 민족주의의 호소력을 더욱 크게 만든다. 그래서 근대적 계급분화나 노동 분화가 덜 진척될 사회일수록 민족에 대한 호소력이 커진다. 시민사회 이익집단의 매개가 두드러지지 않은 경우 가족 관계는 곧 민족이라는 사회단위에 대한 관념을 이끌어내는 문화적인 원천이 된다.

소중화의 긍지와 자존심을 갖는 구한말 조선의 선비들에게 '야만국' 일본의 지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치욕이었다. 그래서 이들의 소중화 문명우월론에서 출발했던 후기 의병부대의 민족주의는 적극적인 대동(大同)의식, 집합 자아의 식으로 발전되어 저항적 민족독립 운동의 동력이 되었다. 간디의 영국의 지배에 대한 항거 역시 단순한 시민권리 쟁취운동이 아니라 집합적 실체로서 인도사람들의 존엄성 회복의 열망이 바탕에 있었으며, 주은래의 사회주의는 "중화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그의 어린 실정 꿈에 바탕을 두고 있다. 조선말기의 유교적 전통을 가진 지사나 학자들이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아(大我)의 길을 택한 것도 집합적 주체로서의 자기인식이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안중근처럼 서양 종교인 천주교로 개종하고서도 "국가를 위해 가족을 잊겠다"고 유교의 가르침을 곧 이토로 저격 행동의 바탕으로 삼았으며,<sup>19)</sup> 일제의 회유를 물리치고 만주로 이주하여 독립투쟁을 한 이회영, 이상룡, 김동삼 등 유교적 지식인이 일체에 그토록 강력하게 항거할 수 있었던 정신적인 힘 역시 유교가 가진 공공윤리, 즉 개인적 권리의식이

18) 제일교포는 일본 시민사회 내의 소수자인가? 만약 그렇다면 제일교포의 차별 문제는 일본 시민사회의 성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수 있다(서경식, 2006: 165-167) 이 경우 앤더슨의 원격지 민족주의론 설득력을 상실한다. 시민으로서 제일교포의 처지는 남북한 간의 관계, 일본과 이들 구 국가와의 관계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즉 본국의 분단과 정치는 제일교포들에게는 매우 구체적 사회현실이다. 그것은 일본사회 내에서의 시민권 즉 참정권 획득으로 종료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19) 안중근, 이기웅 옮겨엮음, 『안중근,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열화당, 2000, 25쪽.

아닌 집합적 기억의 결집체로서 민족주의가 깔려 있었다. 이후 친일의 길을 간 근대화론자들과 이들과의 차이점은 반 개인주의,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긍지였다. 즉 기억 공동체를 무기로 하는 민족주의는 매우 구체적인 정치적 힘을 갖고 있으며, 사회운동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제3세계 사회과학에서 민족, 민족주의의 문화역사적, 국제정치 연관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구체적 사회’, 즉 사회관계와 사회의식을 제대로 접근할 수 없다. 그것은 민족이라는 상징은 기억이라는 자원에서 출발하는 자 존심, 문화적 소속감, 정서적 안정 등과 관련된 열정이고, 그것은 통상 인간에게는 이성 혹은 합리적 계산보다 더욱 원초적인 것이고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관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정책, 제도, 정치 운동 등으로 직결되는 구체적인 사회적 힘이다. 따라서 제국주의 억압, 피시즘, 인종차별주의 등에서 나타나는 민족주의를 주목하여 그것의 병리적인 것 혹은 특수한 것으로만 간주하는 자유주의 시각은 사태의 한 쪽 측면만 보고 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서울의 거리를 뒤덮은 붉은 악마 현상은 피시즘의 악몽을 가진 서구인들에게는 매우 두려운 민족주의의 열정으로 보였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자신의 집단적 기억과 감정을 표출하는 축제의 일종이었던 것도 이러한 시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물론 이제 자본의 수출국이 되고 다민족국가로 변해가고 있는 한국에게 과거의 억압의 체험과 기억에서 나오는 피해자 민족주의는 민주화의 진전에는 상당한 걸림돌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과거 제국주의였던 영·미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가 표방하는 자유주의, 시장주의는 일종의 헌법적 기반을 갖는 민족주의라는 점도 놓쳐서는 안된다. 특히 시장주의자들이 퍼트리는 문명담론, 보편주의 담론에서는 다국적 자본의 이해 및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이해가 은폐되어 있다.

현대 세계에서 지구화된 경제 질서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가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한, 그리고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자기나라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 국가주의로서 민족주의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단지 선진자본주의의 그것은 보편주의 자유, 민주 등 문명의 이름으로 포장되고, 약소국이나 후발국의 행동만 (부정적 뉘앙스를 가진) ‘민족주의’라고 비판받는 점이 잘못되었다.<sup>20)</sup> 민족주의를 편협한 것으로만 공격하는 것은 서구 국가의 국가이기주의의 발로다. 실제로 자신들은 과거에 훨씬 민족주의적이었고, 지금도 자유, 시장의 이름 하에 자신의 국민들에게는 국가에 대한 완전한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애국주의’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름( U.S patriotic act)에도 반영되어 있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애국을 강조하고 있고, 국기, 국가, 국가가 벌이는 전쟁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성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은 자유와 보편문명, 지구화의 사도이고, 미국에 반대하는 차베스는 사회주의자요 편협한 민족주의라라고 공격하는 것은 미국의 논리이고, 미국의 논리를 자기화한 한국 우파의 논리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견지하는 이 헌법적 애국주의는 선진국의 민족주의이며, 그 민족주의를 주창하는 세력은 그 나라의 부르주아이다. 그러나 그 논리를 지지하는 세력은 노동자를 포함한 그 나라의 보통의 시민권자들이다.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이 자국 내 불법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장사를 하고 있는데<sup>21)</sup>, 이것은 국민 국가 내 소수자, 약자들이 시민권을 갖기 위해 어떻게 국가주의, 애국주의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과거 독일의 노동자들이 사회보장의 권리를 얻는 대가로 제1차 세계대전의 총알받이가 된 일, 즉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시민권과 민족주의가 병행한 사실도 이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즉 민족주의, 애국주의에는 보통사람 (simple),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쉽게 다가간다. 그리고 여기서 민족주의는 단순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근대) ‘사회’

20) 일본의 우파는 물론 좌파까지도 한국 민족주의는 주요 공격대상이다. 그러나 일본 좌파의 한국민족주의 비판에는 자국 우파 민족주의에 대한 무비판이 수반된다.

21) 징집에 응하는 댓가로 시민권 부여함.

를 만들고 그것에 편입되기를 원했던 사회적 약자들의 정서가 집약되어 있다.<sup>22)</sup>

##### 5. 민족주의의 보수성과 진보성

일단 민족국가를 수립한 이후 국가주의의 성격을 갖는 정치적 민족주의는 자본주의국가이건 사회주의 국가이건 대체로 국가이기주의와 결합된다. 그 경우 국가에 의해 동원된 민족주의이건 대중들의 자생적인 애국심(patriotism)이건 주로 침략주의와 전쟁과 결합한다. 이 경우 민족주의는 내적으로는 정치적 억압 혹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은폐하고 노동자나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억압하는 정치 사회적 강제력이 된다. 그래서 사실 과거나 현재나 민족주의는 다른 모든 민족을 배제하는 폐쇄적인 이데올로기이며, 오직 제국주의에 저항할 때만이 진보적이고 민주적 내용을 갖는다.

최근의 중국처럼 미국에 대한 저항과 반대의 담론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국가이데올로기로 표방될 때는 내부의 억압, 외국인 차별, 인권탄압을 내장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주의 독재국가인 중국이 자본주의 개혁개방을 표방하고 있는데, 그 동력은 중화민족주의다. 중국은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수단의 다르푸르 학살을 용인하고 있으며, 미얀마의 인권탄압을 묵인하고 있다. 과거의 사회주의 중국은 그렇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이 인권탄압을 묵인한다고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너나 잘해”라고 미국의 관타나모 기지의 인권탄압을 공격한다. 어느 쪽이 더 진보적인가? 민주주의 제도화의 수준이 낮은 중국의 민족주의가 훨씬 내부나 외부에 대해 훨씬 위험하다. 그러나 미국은 국가이해, 자본의 이해를 인권으로 포장하고 있다. 성장의 깃발아래 중국의 농민들은 토지에서 쫓겨나고 있으며, 도시 빈민은 2008년 올림픽 개최 준비를 위해 삶의 터전을 박탈당하고 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를 입은 미국의 뉴우 올리안즈 빈민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미국의 영광’을 드높이는 이라크 전쟁의 뒷전에서 2년이 지난 지금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보를 단순한 시장경제체제, 사회의 물질적 부의 총량과 동일시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시민권, 인권과 결합되지 않은 국가이데올로기로서 애국주의, 혹은 대중들의 집단정서로서 민족주의는 결코 진보적이지 않다. 20세기 이후 ‘민족의 사회화’는 노동운동의 체제내화를 수반하였으며, 60년대 이후 인권, 평화 담론은 바로 민족주의, 국가주의의 보수성에 대한 반격이었다. 세계화가 제국주의 질서와 분명히 차별적이라면 민족은 저항의 단위가 아니며, 과거와 같은 저항민족주의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종속주의 역시 퇴행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은 해체위기 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의 기능적 대체물에 불과하다(홉스 보, 1994:221)

한국이 선진자본주의권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90년대 이후 한국의 대중차원의 민족주의도 점차 애국주의의 양상을 지니기 시작했으며, 보수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2005년의 황우석 사태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 따라잡아서 1등 하기, 음모론, 경제주의, 국가주의 등 민족주의의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황우석 신드롬은 민족주의의 맹목적 측면을 잘 보여준 사례였다. 여기서의 난자 기증자의 인권도, 언론의 공정성과 책임성도, 반대목소리에 대한 관용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집단최면이고 광기의 일종이었다. 최근의 심형래 감독의 디위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 역시 그와 유사했다. 문화상품은 한국 대중들의 민족주의 정서를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 경우 민족주의는 소비의 대상에 불과하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민족주의의 내용을 갖게된 한국의 민족주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22) “동구에서 민족주의 담론이 없었다면 저항세력의 권리와 시민권의 요구는 정치적 구체성을 상실했을 것이다”(Christian Joppke, "Intellectuals, Nationalism, and the Exit from Communism: The Case of East Germany", *Comparative Study of Society and History*, , 1995: 213-241.

그러나 지구화가 자본 권력의 무한대의 확장과, 시장에서의 힘을 갖지 못한 존재의 몰락과 파괴의 과정이라면 자본에 대한 사회적 규제로서 국가의 개입은 진보적 요소를 갖고 있다. 만약 국가가 이러한 시장 통제력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라면 국가 구성원인 대중들의 ‘우리 것 지키기’ 운동은 진보적 요소를 갖고 있다. 대형백화점의 진입으로 생계의 터전을 상실할 위협에 놓은 영세상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대형백화점 진입을 막아낸다면, 그리고 행정권력이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의 진입장벽을 높여 놓는다면 그것은 ‘지역 공동체’, ‘지역 경제’를 지켜낸 점에서 진보적이다. ‘사회’로서의 지역은 보호되어야 하고 그 기초는 경제다. 이 경우 백화점이나 마트가 미국 것인가, 프랑스 것인가, 한국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이 저항은 과거 식의 민족주의 투쟁은 분명 아니다. 이 경우 대자본은 소비자 이익, 소비자 선택권이라는 논리를 무기로 들고 들어온다. 그것은 매우 익숙한 제국주의 문명화 논리다. 여기서는 이미 경제력을 상실한 주민에게는 ‘선택’할 힘이 없다는 점이 간과된다. 그러나 대자본이 어느 정도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가는 국가의 제도적 장치, 규제력 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이제 국가의 정당한 규제력 행사와 그것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저항은 공통분모가 있다.

지구화 시대에 저항은 다중에 의해, 지역주민에 의해, 그리고 제한적으로 국가에 의해 수행된다. 그 중 국가는 가장 강력한 힘의 결집체이다. 그래서 국가가 어느 정도 대중의 참여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약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가의 문제가 바로 국가 간 체제, 세계자본주의 체제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나라들의 주민들에게는 더욱 일차적이고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과거에 제국주의에 의한 주권의 상실이 사회 구성원 중 최말단의 농민, 노동자와 여성에게 죽음, 노예노동 동원, 성노예화를 가져왔듯이 오늘날 국가주권의 상실은 노동자, 농민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시민권 확보 운동은 중요하지만, 그것은 문화의 터전이자 의미 있는 사회단위인 지역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를 변화시키려는 투쟁과 결합될 때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 사회운동을 보면 개인의 권리의식에 호소하는 시민운동이 지역 공동체, 민족공동체 담론에 비해 호소력이 약했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 대중은 권리의 주체임과 동시에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주체이며 소속되기를 열망하는 기억하는 존재다. 사회운동의 주인인 시민은 파편화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존재다. 그래서 정체성의 추구, 혹은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위기에 처한 시민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위치 짓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구시대의 것으로 치부하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중에게 갖는 호소력과 힘을 인정해야 하며, 그것이 국가주의, 파시즘 혹은 우익 보수주의의 무기로 돌변하지 않도록 경계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곧 민족주의가 대중들에게 갖는 호소력을 정확하게 이해는 일이 될 것이다.<sup>23)</sup>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북이 계속 주장한 ‘우리민족끼리’의 구호, 그리고 90년대 들어서 제창한 ‘조선민족제일주의’는 한반도의 통일 민족주의의 정서를 집약해 주고 있다. 그것은 남북 코리안들이 남북한의 통합 국민국가=근대사회= 코리안을 동등한 시민권을 가진 주체로 만드는 작업에서 실패했던 지난날의 패배의 역사를 집약해 준다. 사실 ‘조선민족제일주의’도 시대에 맞지 않은 정치적 구호이지만, 미국이 동아시아를 떠날리 없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우리민족끼리’의 노선은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울뿐더러, 다분히 북한의 체제유지와 통치를 위한 담론이기도 하다. 남북 경제교류도, 통일도 그 어느 것도 ‘우리민족끼리’ 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 민노당 내부에서 제기된 ‘중북파’ 논란도 그 일단이다. 그러나 북한을 시대에 뒤떨어진 미망에 사로잡혀 있는 집단으로 보는 한국 우파 혹은 좌파의 시각은 북한은 남한의 한 측면을 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점을 보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파병 일 년 연장 결정은 남한 국가의 자율성이 국가경제논리에 의해 어떻게 제약을 받는지, 평택 대추리의 주민의 삶이 어떻게 미군기지 이전으로 파괴되고 있는지, 미국 내에서도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는 이라크 전쟁터에 미국과 영국을 빼고는 3번째로

23) 줄고, “시민운동과 민족, 민족주의”, 『198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찰-기업사회로의 변환과 과제』, 길, 2007

많은 파병을 하고 있는 한국의 대미관계, 외교정책의 한계가 상당수 한국인들에게 ‘우리민족끼리’ 담론의 설득력을 더 해준다는 점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민족주의가 여전히 국가에 의해 동원된 이데올로기라기 보다는 주로 대중들의 사회운동의 형태로 존재할뿐더러, 어느 정도의 진보적 측면을 갖고 있는 이유는 한반도가 여전히 분단 상태에 있고, 주변 강대국의 입김을 벗어나 분단을 극복하는 일이 평화질서 구축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생존권 확보는 물론 남한사회 변화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고, 남북한의 주민의 구체적인 생활과 사회적 존재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이기 때문이다. 즉 객관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아직 통일된 근대국가 즉 근대사회 형성의 프로젝트가 완수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민족주의가 보수 이데올로기로만 간주되지 않고 있다. 지구화나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지식인이나 운동세력역시 명시적으로 민족주의를 공격하지 않는 이유도 민족주의가 반식민주의의 내용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자기방어의 요소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단위의 정책, 특히 공공성의 강화를 통한 사회적 시민권의 확대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오늘날의 지구화된 경제질서나 시장주의는 국가의 법적 정책적 규제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사회를 해체시킨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국가 혹은 민족은 포기해야할 단위가 아니라 이들을 보호해줄 힘을 여전히 갖고 있다. 한국 노동자들의 처지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지구적 시장질서에 좌우되기는 하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국제주의 노동운동은 한국 노동자들을 보호해 주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국가 즉 국가차원의 시민권 확대와 공공성 강화의 이상을 포기하라고 권유할 수는 없고, 아울러 국가나 민족이라는 구호는 모두가 구시대적 구호라고 ‘무책임하게’ 말할 수도 없다.

그래서 한국 농민들의 농산물 수입개방반대는 지구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편협한 민족주의이고, 한미 FTA에 반대하는 미국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한국 우파(그리고 세계시민주의 좌파)의 사고는 대단히 도착적이다. 노동자나 농민의 단기적 이해는 바로 국가 혹은 상상 속에서나마 ‘민족의 경계’를 고수하려는 것이며, 그것은 지구화가 실제로는 다국적 자본의 세계화에 그칠 따름이며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노동자들에게는 유사하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가가 더욱더 기업가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무차별적인 시장논리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가 없는 후발국 혹은 한국 노동자들의 더욱 불리한 처지를 무시하고 있다. 과거 식민지 시절 조선과 일본의 노동자들이 그러했듯이 지금도 양국 노동자의 처지는 유사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고 단기간 내에 완전하게 동일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민족주의(국가주의)의 호소력은 살아 있다.<sup>24)</sup>

## 5. 맺음말

민족은 반개인의적인 도덕공동체다. 식민지 민족주의는 차별, 배제, 부정의에 대한 대응이다. 국민국가를 수립한 나라에서 실현되는 민주주의, 시민권, 인권 존중의 사고가 식민지, 이주민 집단에서는 ‘민족’이라는 주권실현 도덕 공동체로 구체화된다. 그래서 후발국 민족주의 운동에서 민족은 이러한 주권의 확보, 존엄성의 확보를 위한 열망의 상징적 결합체이며, 붕괴 혹은 굴절된 공동체를 복원하려는 사회적 응집체다. 국가건설 이후 민족주의가 대단히 병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지구 자본주의의 모순과 차별구조 하에서 민족주의는 그러한 모순을 담지하

24) 최근 UAW 소속의 GM 노동자들의 파업을 관찰해 보면 한.미 양측의 노동자들 모두가 시장개방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 단결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고 있는 집단의 자기해방을 위한 즉자적인 출구이며, 민족주의의 호소력은 민주주의, 시민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호소력 보다 훨씬 강력하다. 그것은 인간이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존재이전에 소속, 자기존중, 도덕질서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는 자국, 자민족의 이해를 추구하는 점에서 특수주의적이지만 동시에 사회 이념으로서 보편적 요소를 갖고 있다.

물론 우리는 국가와 민족의 가치를 내세우는 세력을 칭찬/비판하기 보다는 그것이 실제 함축하는 사회경제적 내용, 즉 시민권과 사회적 보호라는 내용을 주목해야 한다. 과거 식민지 시절의 저항 민족주의가 제국주의/경제주의에 의해 자유와 시민권이 억압되는 현실을 벗어나서 새로운 국민국가 즉 사회를 건설하려는 열망을 담고 있었듯이, 오늘 한국에서의 남북한 평화체제 수립과 통일국가 건설의 요구, 그리고 남한 내에서의 ‘공공성 강화’의 담론은 사회의 복원이란 관점에서 보자면 저항 민족주의의 현대판의 성격을 갖고 있다. 아마도 통일 민족주의는 저항민족주의의 마지막 형태가 될 것이다. 그것은 과거 저항 민족주의가 그러했듯이 변혁의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는 갖고 있다. 분단은 사회를 해체시켰고, 분단의 극복은 한반도에서 ‘사회’를 수립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분단의 극복은 남북한 보통 코리안의 사회경제적 처지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지구화 국면에서 설사 한반도에서 분단이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새롭게 만들어질 국가나 사회가 지역, 세대, 계층으로 극도로 차별화된 국가나 사회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분단극복은 남한에서의 ‘사회 만들기’ 작업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후자의 과제가 전자에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파농(Fanon)이 말했듯이 모든 민족주의에는 함정이 있으며,<sup>25)</sup> 특히 2차대전 후 독립한 국가들의 엘리트가 표방하는 민족주의는 위험하다. 더구나 국가권력 혹은 대중이 비이성적으로 표출하는 민족주의는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나 약소국의 민족주의를 비웃고 민족주의를 포기하라는 강대국과 다국적 자본의 논리 속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존립을 부정하는 비수가 있음을 역시 주목해야 한다. 이 비수에 대항하는 무기가 물론 즉자적인 민족주의 일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양동이의 물을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이 말하는 것처럼 세계화담론에 편승하여 국민국가를 넘어서자는 주장은 역설적으로 국가, 민족 흐름에 빠질 수 있으며,<sup>26)</sup> 대자본의 지배력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세계시민주의, 좌파의 계급 환원주의는 먼 미래의 이상으로만 남아있다.<sup>27)</sup>

#### <참고문헌>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옮김, 세계공화국으로, 도서출판 b, 2006

김동춘, “시민운동과 민족, 민족주의”, 『198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찰-기업사회로의 변환과 과제』, 길, 2007

노태돈, “한국민족의 형성시기에 대한 검토”, 역사비평, 1992년 겨울

서경식, 임성모, 이규수 옮김, 난민과 국민사이; 재일 조선인 서경식의 사유와 성찰, 돌베개, 2006,

신용하, 『한국근대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신용하, 『한국민족의 형성과 민족사회학』, 지식산업사, 2001

25) 프란츠 파농, 남경태 옮김,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 그린비, 175-231쪽

26) [한겨레 21], 2005.5.21

27) 가라타니 고진의 세계공화국의 이념은 자본에 대항하는 기지로서 국가의 위상을 새롭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 푸르동과도 다른 입장에 있다(가라타니 고진, 2006) 그러나 네이션을 서구의 이론가들의 입장을 따라서 ‘상상의 공동체’라고 보는 그의 시각은 역시 그가 제국주의 국가의 지식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을 드러내주고 있다.

안중근, 이기웅 옮겨엮음, 『안중근,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열화당, 2000

이종석, '주체사상과 민족주의',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1995

프란츠 파농(Franz Fanon), 남경태 옮김,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 그린비, 2004

E.H. 카야,

E.J. 홉스봄, 강명세 옮김,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작과 비평사, 1994

Geertz, Clifford, Old Societies and New States : The Quest for Modernity in Asia nd Africa, The Free Press, 1963(reprinted from John Hutchinson & Anthony D. Smith eds., Nation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Gellner, E., Thought and Change, London: Weidenfeld and Nicholson, 1971

Giddens, Anthony,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Joppke,Christian, "Intellectuals, Nationalism, and the Exit from Communism: The Case of East Germany", Comparative Study of Society and History, , 1995: 213–241.

Greenfeld, Liah, Nationalism :Five Road to Modernity, Cambridge, Mass.: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Greenfeld, Liah "Transcending the Nation's Worth", Daedalus, Vol. 122, No. 3, Summer 1993

Smith, Anthony D., National Identity, London: University of Nevada Press, 1991

Weber, Max, "The Nation", ( H.H Girth and C. Wright Mills, eds, From Max Weber: Essay in Sociology, Routledge and Kehan Paul, 1948)